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 27 동권 150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국산품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을중 회계사 :

코로나 비대면시대 회계환경 변화와 2020년분 결산
외부감사 주의사항 (금융감독원 안내)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자금으로 반영한 후 급여 등으로 대체함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액션

- 원원 아닌 직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
금 등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청년창업자·성공기업가가 창출한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법인세·배당
소득세·상속증여세의 전체 합계 >

개념구분	적용세금, 계산방법, 평균세율, 기타 공과금	총 세금부담 (지방주민세 10%)
1. 근로연봉 1.5억원	근로소득공제(70~2%), 4대보험공제, 기본공제, 연금공제 등 최대 약 3천만원 차감공제하면 과세소득은 1.2억원 ⇒ $1590만 + 3200만 \times 한계세율 35\% = 2710만원$	소득세 3천만원, 4대 보험 등 2500만원
2. 법인세 등	순이익 기초 2억원 $\times 10\% + 초과(10.5억 - 기초 2억) \times 20\% = 1.9억원 \times 1.1$	약 2.1억원
3. 전액 배당 가정함	① 세전 순이익 10.5억 - 2.1억원 = 8.4억원(이익준비금 10% 생략 후 전액배당가정) 배당시 15.4% 원천징수 ② 대표 본인 연봉에 합산시 종합소득세율 35%부터 적용 근로소득 순액 1.2억원+배당 8.4억원 $\times 1.11$ (총액가산) = 총 10.524억원 ③ 5억원까지 1억7060만 + 초과 5억 $\times 42\% + 초과 524만원 \times 45\% = 3.83억 \times 1.11 = 4.213억$ ④ 배당소득공제는 8.4억 $\times 11\% = 9240만원$ 임 ⑤ 배당금액의 건보료 : 약 8억 $\times 0.068$	종합소득세 ③ 3.83억원 - 0.271억원(근로세) - 0.924억(배당공제) 2.635억원 $\times 1.1$ (지방세) = 2.8965억원 (= 약 2.9억원)
4. 상속·증 여세	① 대표연봉(1.5억, 순액 1.2억)은 전액 가사지출 ② 배당액은 자녀에 상속 또는 자녀 2인 증여 가정 ③ 증여액은 배당 8.4억원 - 건보료 0.5억 - 종소세 2.9억 원 = 5억원	5.0억 $\div 2$ 인 = 2.5억원 증여 $1억 \times 10\% + 1.5억$ $\times 20\% = 0.40억 \times 2$ 인 = 0.8억원
총 세금합계 (유효 부담 세율)	근로소득세, 4대보험, 법인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3천만원+2500만원+2.1억원+2.9억원+5440만원+0.8억원 (대부분 중소기업인은 1, 2, 3단계까지 진행(유효세율 51%))	총 6.894억원 (창출이익 12억원의 57.45%에 해당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03 호 / 주간 4호

2021. 1. 27.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자·성공기업가가 창출한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증여세의 전체 합계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코로나 비대면시대 회계환경 변화와 2020년분 결산 외부감사 주의 사항 (금융감독원 안내)	2
C E O 에 세 이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국산품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해외 주식 매각과 세금 - 개발관련 - 법인 차량 매각시 부가세 관련 문의 - 금 관련 매입자납부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자금으로 반영한 후 급여 등으로 대체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2021년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를 조정 -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0 11
직 장 인 Survival	가난한 채로 사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차이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1754, 2020.04.20) -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법령부가-1491, 2020.05.25)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부가율 15~40% 확대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임원 아닌 직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13
세 무 정 보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16 38
회 계 정 보	-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코로나 비대면시대의 회계환경 변화와 2020년분 결산 외부감사 시 주의사항 (금융감독원 안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핵심공통요약 : ① 회사 책임으로 재무제표 작성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금융당국) ② 자산 5천 이상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외감대상 ③ 모든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기재함 ④ 매년도의 회계감리 중점사항 확인 · 대비 ⑤ 과거년도 회계 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공시함

2.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untact 감사상황(기존 현장대면 → 비대면 대체적 절차)

- ① 감사인 격리조치 등 : 재고실사입회 → 실시간 화상중계기술(zoom 등)로 재고실사 관찰
- ② 감사인 국외방문 불가 : 해당 국가 적격회계법인 재고자산 실사입회, 현지 회계법인의 해외종속회사 감사결과 활용
- ③ 감사증거 원본 · 실물 접근불가 : 사본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추가적 감사절차(온라인 스캔과정, 드론 촬영, zoom 카메라, 원본 문서의 작성 · 보관 · 확인의 인증절차 판단)
- ④ 코로나 영향받는 자산의 손상검사와 회수 가능액 추정
 - 손상 징후는 회수가능액 추정하여 차액의 손상반영
 - 코로나로 시장 불확실성 증대 → 미래현금흐름 예측 어려움 → 시장이자율 상승, 자산손상 인식 → 감사인은 감사위험 대응해 보수적 관점 견지 : 금감원과 한공회의 감독지침 활용

3. 감사전 재무제표 자기작성제출 :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사전 제출

- ① 제출의무 : 상장법인,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대법인, 금융회사 등
- ② 기본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주석
- ③ 미제출공시 :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됨
- ④ 감사인 대리작성, 자문 금지 → 외부 제3회계법인에게 PA(Private Accounting) 위탁

⑤ 제출기한 : 결산주총 6주전(3월 29일 주총이면 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함.

4.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감사준비(회사 대표가 운영책임, 내부감사가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인 감사·검토 등)

◦ 상장회사(2020년은 자산 5천억, 2021년은 1천억원 이상, 2022년부터는 모두)

◦ 감사방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질문,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엄격검증 실시함.

5. 감사인은 피감상장회사와 협의해 핵심 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함.

◦ 목적 : 회사의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며, KAM 선정이유·왜곡위험·감사절차를 기재함.

◦ 예시 : ① 잘못 표시될 위험 높은 분야(수익인식기준 등) ② 경영진의 중요한 판단 영역 ③ 불확실성 높은 추정액 ④ 당기의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감사영향효과 등

6. 금감원이 매년 선정하는 중점심리 회계쟁점 등의 신중처리

◦ 재고자산 : 실질손상, 가격하락, 진부화, 원가상승(저가법 적용하고 순실현가능가치 평가)

◦ 무형자산(입증 가능액을 자산화, 합리적 회수가능액 측정하여 손상평가함)

◦ 국외매출(국내거래보다 신용위험·운송위험 높아, 거래상대방의 실재성 입증, 매출액의 실질반영 : 총액, 순액 등)

◦ 이연법인세(세무조정 차이, 미사용결손금, 세액공제 등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어야 가능함)

7. 회계오류 예방과 과거오류 수정공시

① 적정재무제표와 공정감사 책임 → 회계기준 착오 위반시 → 전기수정·공시(경감 등)

②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의 회계·감사 의견차이 :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조율 → 수정

③ 회사가 회계기준 몰라 오류처리 → 수정재공시 자체가 신뢰도 저하(사전예방 위해 금감원 지적사례를 참고함)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국산품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 업체가 돌연히 무너졌다. 외국기업으로 오인되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기업이 외국기업이라 한들 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한국인의 기묘한 국민정서가 빚어진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외국상품 불매운동 등을 가르켜 애국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반대다. 양담배 추방 운동을 미국인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 역시 한국상품불매운동을 벌이면 한국의 산업은 어찌 되겠는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양담배 불매운동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진다.

필자는 세일즈맨으로 뿔 때 외국인을 만나면 일부러 양담배를 피웠다. 세계가 투명하게 주시하고 교류하고 있다. 우리 아집만 내세워서 닥쳐올 파고를 헤쳐 나가기 힘들다. 내것만을 챙기려는 시각이 통할리 없다. 진정으로 우리 몫을 챙기려면 대등한 교류관계에서 마인드부터 먼저 국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연 자원하나 변변치 못한 나라다. 석유도, 쌀도 수입해야 한다. 한국의 힘이란 사람뿐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

"외국기업도 한국에 있으면 한국기업이다."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즈음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로 국민에게 호소하였겠는가. IMF전 한국의 대기업들이 영국 등에 진출했을 때 일이 새삼스럽다. 무엇 때문에 기업의 공장 준공식 때 쿼터 높은 영국여왕까지 참석하였을까?

"무엇이 진정한 국산(國產) 입니까?"

IMF직후 Fila코리아는 수입 브랜드라는 이유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 그래서 3억원을 들여 일간지 18개에 5단통 광고를 냈다. 그 광고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헤드라인이다.

이 광고의 문제 제기는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국산품의 의미를 따져보고 또

한 국산품 애용, 외국상품 불매운동이라는 "빠뜰어진 애국심"을 바로 잡기 위한 경종이었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상표만 붙인게 국산인가?

해외상표라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산인가?

오히려 더 이상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산이라고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외국합자회사로서 Fila코리아는 240여개 국내업체와 더불어 한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내 판매용 제품의 97%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6년간 1조6천 억원에 달하는 신발도 수출하였음을 알렸다. 다행스레 Fila코리아의 고객들은 좋은 호응을 보여 주었다. 물론 기업은 스스로 IMF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IMF의 소비 위축기에도 Fila코리아는 건전하게 경영되었고 이윤도 목표한 바대로 많이 났다. 따지고 보면 국산, 외국산의 경계도 모호한 점이 많다. 사실상 수입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겉데기만 한국산이고 알맹이는 모두 외제다. 더욱 한심한 일이 있다. R&D에 관하여 "하는 일의 90%이상이 외국자료를 찾는 일이었다."는 한국최대 재벌인 S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증언이다. 어떻게 돈을 주고 라이선스를 들여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만도 "첨단업무"로 통한다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판에 순수국산기술제품이 얼마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열린 마음으로 상생(相生, Win Win)하는것. 바로 그것이 외제상품 불매라든가 빠뜰어진 애국심 그리고 부족한 기술을 뛰어넘는 오늘의 슬기가 아닌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5일 (금)	1월 18일 (월)	1월 19일 (화)	1월 20일 (수)	1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100.30	1097.90	1104.40	1102.10	1100.00
일	본	엔 (JPY)	1059.97	1057.35	1065.15	1060.78	1062.39
캐	나	다 달 러 (CAD)	870.39	862.42	865.89	865.89	871.22
홍	콩	달 러 (HKD)	141.91	141.59	142.44	142.17	141.90
위	안	화 (CNH)	170.20	169.75	170.19	169.66	169.95
유	로	화 (EUR)	1337.41	1326.32	1333.62	1337.34	1332.65
호	주	달 러 (AUD)	855.92	846.26	848.12	848.95	852.89
싱	가	폴 달 러 (SGD)	830.98	825.33	829.91	829.27	830.4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2.62	271.99	272.56	272.12	271.94

해외 주식 매각과 세금

Q 몇년전에 중국 현지 법인에 지분참여 하였는데 그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5% 세금 공제하고 국내로 송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국내에서의 세금등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국내에서의 세금 종류 및 신고납부 기한

질의2) 국내에서 다른 소득이있는경우 합산 여부

질의3) 국내에서 신고납부시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여부

A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국내양도소득과 동일합니다.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발관련

Q 외주업체로 생산이관한 신규아이템 생산과정에서 초기에 재료비과다, 불량발생,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등으로 외주업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당사가 잘 지침을 내리고 콘트롤 못한 책임으로 외주업체에 개발손실비용 명목으로 추가외주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경상연구개발비? 외주가공비? 잡손실..

A 개발과정에서의 지침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배상성격의 금액이라면 연구비보다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차량 매각시 부가세 관련 문의

Q 당사는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스타렉스를 2019년 1월 22에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헌데 회사 사정상 구입했던 스타렉스를 당월(2020년 11월)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초 매입시 부가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토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법인의 업무용승용차(화물포함) 중 개별소비세 과세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이 경과 전에 다시 매각할 경우 최초 공제 받은 부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요? (관련조항이 있는지요?)
2. 부가세를 반환 또는 불공제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회사에서 보유해야하는지요?

매입세액공제받은 승합차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해당 승합차를 면세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일부 반환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귀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 관련 매입자납부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회사는 10.30일 A사에 스크랩(철부산물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받은 A사는 공급받은 스크랩 대금을 다음월인 11.10일 입금하였습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그렇다면 공급받은 A사는 10.30부터 입금한 11.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0.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 2) 더불어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입금받은 날인 11.10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지않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인가요?

A 1. 부가가치세 지연입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금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한 후 급여 등에 대체 합산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법인의 비용을 결제한 경우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만큼은 일반경비와는 달리 반드시 법인명의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인정이 되므로,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법정증빙을 위해서도 거의 모든 기업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해당 임직원의 급여 등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함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일반경비로 충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카드결제시점에 미지급비용을 상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상환여부에 따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거나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한다.

즉,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었으나 아직 지출금액의 소속계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결산계정인 가지급금으로 반영한 뒤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해당 사용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는 경우는 사용시점에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부분을 입금되는 금액과 상쇄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① 임직원이 법인카드 사용

차) 가지급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	-----------	---------	-----------

②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입금

차) 보통예금(또는 현금)	1,000,000	대) 가지급금	1,000,000
③ 신용카드 결제일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

하지만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사용시점에 가지급금으로 우선 반영한 뒤, 상환 받지 못하게 되면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① 신용카드 사용시			
차) 가지급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②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차) 급여	1,000,000	대) 가지급금	1,000,000
③ 신용카드결제일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예금	1,000,000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에 상환한 경우, 즉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실제의 부담은 임직원 개인이 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 개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회사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서이46013 - 10066, 2002. 01. 10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3도8095, 2006. 5. 26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1년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현행		개정	
구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법인세율

법인 종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억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억2000만원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보유기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년 미만	50%	40%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50%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포함)대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 포함)				다주택자 (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음 포함- 변동없음)
	2020년	2021년			
		보유	거주	합계	
3~4년	24%	12%	12%	24%	6%
4~5년	32%	16%	16%	32%	8%
5~6년	40%	20%	20%	40%	10%
6~7년	48%	24%	24%	48%	12%
7~8년	56%	28%	28%	56%	14%
8~9년	64%	32%	32%	64%	16%
9~10년	72%	36%	36%	72%	18%
10년 이상	80%	40%	40%	80%	20~30% *

* 비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연 2%로 최대 15년 이상 30%,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혜택없음



가난한 채로 사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안정을 추구, 부자는 변화를 추구

언제 지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머리는 "지금의 이런 삶의 모습들과 상황이 싫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속마음은 악마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태에서도 우선 살아갈 수 있고"라고 반면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좋은 생각, 더 나은 행동,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식,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간 관계, 새로운 체험... 그리하여 부자가 실패 할 수도 많지만 실패에서 배우고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인 시각, 부자는 장기적인 안목

가난한 사람의 다음의 특징은 시간적인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고, 마치 아기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목표와 꿈에 대해 장기적인 기간에 꾸준히 노력하지 못한채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에게 성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체적인 사고, 부자는 추상적인 생각

가난한 사람은 노하우를 구할 때도 쉽게 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도 단 ○개월 이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에 끌려 상품을 구매하는거죠. 구입 후에는 귀찮아 지거나 묵혀둡니다. 그러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번에는 관촬을거야!"라고 또다시 노하우를 구입...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알기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노하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흥내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잘되어 가고있는 사례와 전혀 다른 장르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업무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생각을 들이는 첫 걸음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왜?"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 간단한 훈련입니다. 연습이 있을뿐!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임원 아닌 직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 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1754, 2020.04.20

Ⅰ 질 의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4년 전직원에게 00보수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화합 격려금, 00규정에 의거 식대보조비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부 종합감사 결과 상기 지급건에 대하여 회수의견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음

질의내용

- 00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에 대한 손금 여부
- 감사처분 결과 회수통보를 받은 급여에 대해 강제 회수가 가능한지 및 손금불산입 여부
 - － 해당 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손금 불산입 되는지 여부
 - － 해당 금액이 직원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 － 노사화합격려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

Ⅰ 회 신

내국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제과-233, 2020.05.19

Ⅰ 질 의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Ⅰ 회 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29, 2020.05.25

Ⅰ 질 의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법령부가-1491, 2020.05.25

질의

- 갑, 을이 공동소유 중인 부동산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확장을 위한 건물 증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 을 각각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여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

한 후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7인의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이에 따라 A법인은 변경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구원과 ◇◇시에 총 * , ** * 억원의 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

-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후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쟁점사업비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쟁점 사업비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갑과 을(이하 "공동사업자A")이 의료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후 건물의 일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공동임대사업자")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공동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B")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자B가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만을 영위하게 된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A가 공제받지 아니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B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 내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지급... 민생안정 패키지 지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

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 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전했다.

간이지급명세서 내달 1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민간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간이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수급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신속한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변환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2021. 1

-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밑줄은 미발표 사항

기 본 방 향

- ◇ '20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 ◇ '21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 5G 기지국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신탁세제 개편 관련 세부내용 규정
- 금융투자소득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규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
-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 추가
-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
-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 공직퇴임관세사 수입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
- 경정청구시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II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 법률(조특법§ 24) 개정내용 〉

◇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①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으로 확대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②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

중견 3% / 중소기업 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모든 기업 3%) 부여

③ (신산업 투자 지원 우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를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기업 12%)

· 대상 업종, 세액공제 제외 사업용 자산의 범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및 판정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대상 업종) 부동산임대 · 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세액공제 제외 사업용 자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 제외
 - 다만, 건물 ·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 사업용 자산**은 공제 허용(시행규칙 개정사항)
 - * 연구 · 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 ** (예)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건설업) 굴삭기 등 중장비 (운수업) 차량 · 운반구, (도소매업 · 물류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신성장 · 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시행규칙 개정사항)
 - *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 · 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 추가
- ※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
 - * ①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 ②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③상시근로자 수 유지

◎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특령)

-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발표('20.12.17)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여 우대 세액공제율(+2%p) 적용
 -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 · 전송 · 전원설비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 26의2) 개정내용 〉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대상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 (투자대상 자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 · 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
- **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업분야
- (의무투자비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판정)

◎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 27) 개정내용 〉

- ◇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투자방법)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주식·자산 처분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 확대*
- * (현행)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
(추가)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2) 소비활력 제고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상향 : 1만 원 이하
→ 3만 원 이하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소득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상향
: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 →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이하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조특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현 행) 연구원 인건비·재료비·위탁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적용
- (개 정)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추가
 - *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특허사무소 등)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현 행) 미래형 자동차·인공지능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개 정)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
 - (디지털 뉴딜) 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9개* 추가
 - *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등
 -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 12개* 추가
 -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등
 - (의료·바이오)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 추가
 - (제외)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신성장·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는 8개 기술*은 제외
 - * 인포콘텐츠 기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❶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❷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❶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❷이공

- 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 신탁세제 개편 관련

❶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소득령)

〈 법률(소득법§ 2의3) 개정내용 〉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
 -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서는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 * 위탁자가 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 보유

❷ 법인세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법인령)

〈 법률(법인법§ 5) 개정내용 〉

-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선택 허용
 - 법인세 과세 신탁이 허용되는 신탁의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 허용
 - *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

❸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부가령)

〈 법률(부가법§ 3) 개정내용 〉

-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
- ◇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
 -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및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
 -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관련 (소득령)

※ 시행: '23.1.1.

①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이익 과세체계 개편

〈현행 과세제도〉

- (신탁형) 분배금, 집합투자증권 양도·환매 → 배당소득
- (회사형) 분배금 → 배당소득 / 집합투자증권 양도 → 양도소득

－ (펀드의 분배금)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그 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 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②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금액)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이월결손금 공제)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적용)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000만 원, 250만 원 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한도로 공제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규정

〈 법률(소득법§ 87의18) 개정내용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①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 원

－ (국내 상장주식등 기본공제액) 5,000만 원

－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요건)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

④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 법률(소득법 § 87의12) 개정내용 >

- ◇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비과세 주식등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대상)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장외(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의제취득가액) '22.12.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⑤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 법률(소득법 § 148의2) 개정내용 >

- ◇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원천징수 소득금액)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 (원천징수 세액)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20%) 적용
 - *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 선택
- **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년 1.10일, 7.10일까지 두 차례 납부
 - (원천징수 세액 정산)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시 환급
 - *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

- '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 범위를 현행 유지
 - * (현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 원, '21.4월 이후부터는 합산 3억 원 (개정) '22년 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 원

● 벤처캐피탈이 유망 중소기업 출자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 § 13의4) 개정내용 >

- ◇ 벤처캐피탈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유망 소부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유턴기업 세제지원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규정(조특령)

< 법률(조특법 § 104의24) 개정내용 >

- ◇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여 세액감면
-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text{국내 신설 사업장의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의 매출 감소액}}{\text{국내 신설 사업장의 매출액}} \quad (\text{최대 1})$$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❶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부가령)

< 법률(부가세법 § 61) 개정내용 >

- ◇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 (현 행) 4,800만 원 → (개 정) 8,000만 원

❷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5~30% → 15~40%)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연 매출 4,800~8,000만 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4,800만 원 미만은 납부면제)

❸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부가령)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

○ (현 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사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개 정)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 다만, 위의 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예정)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 *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조특령)

- (계약유형 추가)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 추가
-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 추가
- (소득금액 계산) 이자·배당소득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손 공제
- (소득증명서류 폐지)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

2) 일자리 지원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 (현 행)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① 또는 ②)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한도: 240만 원)
 - ①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②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중 ②에서 사업자 요건을 폐지하고, 대상 직종 범위 확대(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조특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현 행)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위탁훈련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 포함



- (개 정) 인력개발비 대상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

●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 (소득령)

〈 법률(소득법§ 52, 조특법§ 95의2) 개정내용 〉

-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적용
 -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구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 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소득령)

〈 법률(소득법§ 89②, § 104) 개정내용 〉

- ◇ (종전) 양도소득세제상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
 - 다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
 - *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②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 양도
- ◇ (개정)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10%p) 적용은 제외*

* 고가 1주택(9억원 초과)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 9억원 초과는 기본세율 과세

- (개 정)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위 표의 ① 또는 ②)·효과(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소득령)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 (현 행)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

- (개 정) 장내파생상품·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

●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 법률(소득법§ 37등) 개정내용 〉

- ◇ (가상자산 과세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 ◇ (비거주자와국법인) 비거주자와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세액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납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금액 납부

- ◇ (시행시기) '22.1.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① (필요경비)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 적용

*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

- ② (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 ③ (의제취득가액) '21.12.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2.1.1



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 ④ (비거주자 인출시 납부세액)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 자산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국기령, 국징령, 관세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현 행)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개 정) 최근 2년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20%)
- (현 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 지정
- (개 정)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 *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 ※ (시행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부가령)

- (현 행)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개 정)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확대
 - * 시행시기: '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상증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 * 시행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제도 관련(상증령)

〈 법률(상증법§ 41의2) 개정내용 〉

- ◇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① 신고내용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② 신고기한	○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소득령)

-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 (현행)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소득령)

〈 법률(소득법§ 21) 개정내용 〉

-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조특령)

-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제외
- * 총급여액이 0~3,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 원 지급 / 현재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조특령)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 발표('20.7.22.)

- ①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 ②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국조령)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 매년 국세청에 해당 계좌정보 신고

- (과태료 상한액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설정
- (과태료 감경요건 확대) 외국환거래 보고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점 감안,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50% 범위 내)

구 분	현 행		개 정	
과 태 료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원 이하	(좌 동)
	20~50억원	2억원+20억원 초과 15%	20~50억원	
	50억원 초과	6.5억원+50억원 초과 20%	50억원 초과	Min[(6.5억원+50억원 초과 20%), 20억원]
50% 이내 감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감안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법인령, 소득령)

- (현 행)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불일치
 - *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의 거래시 거래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 장내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소득세법) 양도일 전·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양도 시 20% 할증 적용
- (개 정) 법인세법·소득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일치 및 합리화

-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20% 할증 적용
- * 경영권 이전 관련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 (중부령)

〈 법률(중부법§ 9②) 개정내용 〉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 사업특성을 고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
-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법인령)

- ① (명칭 변경)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통일
: (소득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② (지정기간 변경)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관리 강화
 - (현 행) 지정일 이후 5년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인정
 - (개 정) 신규 지정시 지정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투명성이 확보된 단체의 재지정시에는 6년으로 연장
 - ※ (시행시기) '22.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③ (의무 및 취소사유 합리화)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중복제출 의무 조정*, 공익법인 취소사유 합리화** 등 정비
 - * (현행) ①결산서류와 ②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각각 공개
(개정) ①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개한 경우 ② 공개 의무 면제
 - ** (현행)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업무 위반시 취소 가능
(개정) ①, ②, ③ 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1천만 원 이상 추징시 취소 가능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중부령)

-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0.12.17)
- (현 행)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적용
- (개 정)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종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 원 유지

※ (시행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 법률(조특법§ 104의8) 개정내용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대상) 종합소득세 · 법인세(건당 2만 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 원)

·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세액공제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율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 세액공제

●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세령)

○ 이종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현행) 과세표준 = '개조 전 차량 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개정) 과세표준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주세령)

○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각각 1ℓ 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21.3.1.~'22.2.28. 적용)

*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20.1.1. 개정된 주세법 시행)

** 현행 세율: (맥주) 830.3원/ℓ, (탁주) 41.7원/ℓ ***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조특령)

○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

* (비과세 대상)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국기령)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법률(국기법 § 39) 개정내용 〉

-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외
 - 구체적인 적용 제외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 (적용 제외대상)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공직퇴임관세사 수입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관세사령)

〈 법률(관세사법§ 13의6) 개정내용 〉

-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입 제한
 -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국가기관 범위) 모든 국가기관(소속기관 별도)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
 - *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통관업 범위)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입 제한하되,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가능한 통관업*은 수입제한 예외 인정
 - * 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

●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시 통보·공고방법 구체화(관세사령)

〈 법률(관세사법§ 24의2) 개정내용 〉

- ◇ 관세청장이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 통보·공고·공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
 - (홈페이지 공개기간) 등록취소: 3년,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과태료: 6개월, 전책: 3개월

2) 납세자 권익 보호

●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 * 납부 → 납세자의 경정청구(감액 신청)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 국세환급
- (현 행) '경정청구일 ~ 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연 1.8%) 지급
- (개 정) '납부일 ~ 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시 가산세 면제 특례 신설(국기령)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 * 다만,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현 행)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 통지
 - *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 (개 정)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현 행)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 *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 (개 정) ❶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적시, ❷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 (현 행)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을 납세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개 정) 납세자가 탈루세액의 '일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탈세제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허용(납부된 세액 범위 내)

3) 납세 편의 제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 (현 행)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 (개 정)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 법률(조특법§ 104의8⑤) 개정내용 〉

- ◇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 * (대상)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 ▶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세액공제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소득령)

- * 국세청-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시 반영
-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추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 (법인령)

- *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재한 서류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축소 : 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 → 30억 원 이상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규정(관세령)

- *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시에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 제출 의무 부여

〈 법률(관세법§ 136③) 개정내용 〉

-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 ▶ (현행) 선박회사·항공사 → (개정) **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또는 ②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또는 ③직전연도 운송 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 허용*
 - * 선박회사·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신속 출항 가능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FTA관세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既발표('20.7.22.)
-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 절차: (주무부처 장관)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 (수입자) 운송입항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발급 → (수입자)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

◎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FTA관세령)

-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

◎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FTA관세령)

-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기본방향 既발표('20.7.22.)

〈 법률(국기법§ 85의6⑧) 개정내용 〉

- ◇ 조세정책 연구·평가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자료

- ① (요청 방법) 표본자료 이용자가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요청
 - *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방법 기재
- ② (제공 방법) 국세청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 조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전부개정('20.12월)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편제·조문 순서 개편 및 불명확한 표현 정비

III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1개

☐ 내국세(18개)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과세자료제출법 · 교육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관세(3개)

- 관세법 · 관세사법 · FTA 관세법 시행령

2 추진일정

☐ '21.1.6.(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1.1.7.(목)~1.21.(목), 입법예고

☐ '21.1.28.(목), 차관회의

☐ '21.2.2.(화), 국무회의

☐ '21.2.8(월)~2.12.(금), 공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 국세청, 2021. 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 '20.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I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안내입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Ⅰ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일자	비 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	1. 15. ~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 15. ~1. 17.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 18. ~	홈택스 ⇔ 회사·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 20. ~	홈택스 ⇔ 근로자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Ⅱ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간소화 자료 조회
본인 인증	도입	이용	본인 인증
①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기존	PC(홈택스) 손택스 모두가능	①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②행정전자서명(GPKI) ③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②행정전자서명(GPKI)			
③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④휴대전화			
⑤신용카드			
⑥I- PIN(개인식별번호)	'21. 1월	PC(홈택스) 가능	④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 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 (한국정보인증)
⑦지문인증			
⑧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 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 (한국정보인증)			

- 신용카드·I- 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



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08:00 ~ 24:00 ⇨ (개선) 06:00 ~ 24:00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 20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본인 인증 수단)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 PIN, 지문인증
 -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신청

-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 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취소

-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 부양가족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의 제공이 취소됩니다.
 -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는 방법
 - 팩스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에서 동의 취소 신청 정보를 입력 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 1544- 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양가족 중 본인(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 뿐 아니라,
 - 근로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IV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



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합니다.

항 목	세부항목	제공내용
의료비	안경구입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20년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
월세액	월세 납입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신청하지 않은 의제기부금 포함)

1.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직접 수집

(개선) 국세청이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일괄 수집·제공

◇조회방법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발급 > 의료비 화면에서 조회

2.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¹⁾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²⁾ 세액공제합니다.
- 1)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 2)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 근로자가 영수증을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집

(개선) 국세청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제공

◇조회방법: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발급 > 주택자금/월세액 화면에서 조회

3. 실손의료보험금

- ☐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 자료와 별개로 수집하여 홈택스(My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

(개선)국세청이 보험회사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

◇조회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 의료비 화면에서 조회

- ☐ (차감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의료비 지출액 '20년 100만 원

☐ 보험금 수령액 '20년 8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 원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 원
③공제대상 의료비(①- ②)	-	20만 원

-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 의료비 지출액 '19년 100만 원 → 의료비 공제 '19년 100만 원

☐ 보험금 수령액 '20년 8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②보험금 차감액	80만 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 ②)	20만 원	-

※ '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19년 100만 원→의료비 공제 '19년 100만 원

의료비 지출액 '20년 2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년 250만 원('19년 귀속 80만 원+'20년 귀속 17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200만 원
②보험금 차감액	80만 원	170만 원
③공제대상 의료비(①- ②)	20만 원	30만 원

※ '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20.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용도	자료수집처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법정기부금1)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2)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근로 복지공단

1) 기부금액(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2) 기부금액(근로소득금액× 30%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 1), 2)의 기부금과 다른 기부금을 합해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문의처	영수증 발급처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kcomwel.or.kr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 기부금 공제 방법

기부금 신청방식	수집처	간소화자료 제공받는자	세액공제 대상자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행정안전부	세대주*	세대구성원 중 1인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기부한 자	기부한 자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공제대상 기부금 전액이 세대주 명의로 구축·제공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다운로드(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주가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 자료제공 동의요령은 '참고자료7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참조
 -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다운로드(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원이 공제 가능
-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방법은 상기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V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 1.15.~1.18.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21. 1. 15. (금)~1. 17. (일), 8시~24시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21. 1. 15. (금)~1. 18. (월), 18시~22시(18일은 18시~20시)

□(신고방법)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하여 신고

* (P 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 국세청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추가·수정제출을 안내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미제출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 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공제 항목		제공 내용	제공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특별 소득 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조특법§ 16①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외(조특법§ 16①2호 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제로페이 사용금액,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국외 교육비용	×
	기부금	기부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관계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증명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서비스 내용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특히,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 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간편 제출하기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가능하고,

-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